

정책제안 자료집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2010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노틸러스아리, 무기제로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제주군사기지저지외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평화박물관, 한신대 평화외공공성센터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2010 평화군축박람회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며	04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展	
정책제안 1 군축, 과연 이상에 불과한가?_국방예산 삭감/ 참여연대	07
정책제안 2 무책임한 무기거래_무기거래금지협약/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17
정책제안 3 21세기 “모순(矛盾)” 전쟁_MD 도입 반대/ 평화네트워크	19
정책제안 4 우리는 파병을 반대한다_한국군 파병반대/ 나눔문화/참여연대	21
정책제안 5 평화의 섬을 평화의 섬답게_제주해군기지반대/ 제주범대위	23
정책제안 6 평화를 위한 나눔_대북지원확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4
정책제안 7 탈많은 미군기지이전_미군기지 환경 소음 대책/ 평택평화센터	25
정책제안 8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_천안함 진상규명/ 참여연대	28
몹쓸 나쁜 비싼 무기展	
정책제안 09 No 핵무기 Yes 비핵지대_핵무기 반대/ 평화네트워크	30
정책제안 10 죽음의 비_집속탄 생산금지/ 무기제로팀	33
정책제안 11 불필요한 국산 고성능 전차_차기전차K2 개발중단/ 무기제로팀	35
정책제안 12 천문학적 예산, 예견된 부실_한국형헬기 개발중단/ 전쟁없는세상	36
정책제안 13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 추구_이지스함 도입반대/ 평화바닥	37
정책제안 14 공격적 전력투자_차기전투기 사업반대/ 전쟁없는세상	39

13개 평화단체로 구성된 2010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이하 박람회준비위)는 지난 10월 2-3일 이틀간 조계사 앞마당에서 「2010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10/2~10/3, 조계사 앞마당)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장갈등과 군비확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그리고 평화공존을 향한 시민 대안과 상상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전세계 1년 군사비는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전세계가 1995년 수준으로 군사비를 줄이면, 6년안에 전 세계 외채를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은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가 조성한 긴급유자재원 총액(9,850억 달러)보다 많은 돈입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국내총생산) 수준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예산과 무기가 부족해서일까요?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면 제2, 제3의 연평도 사건은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위산업 박람회, 에어쇼,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등을 대규모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의 살상력, 파괴력, 공격력이 야기할 수 문제점, 비인도성에 대한 검토나 사회적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 집속탄 수출국입니다. 분쟁지역으로 수출된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작은 폭탄으로 흩어져 무고한 민간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평화군축박람회는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군비축소와 신뢰구축, 평화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모아 낼 계기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된 것입니다. 평화군축박람회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14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60여 점의 판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전시물은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 제안展>, <뭉실 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0 평화군축박람회 국회 전시회를 11월 29일 30일 양일간 공동개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료집은 2010 평화군축박람회에 참여한 평화단체들의 정책적 제안들을 모은 것입니다.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고조된 지금 이 행사를 여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비쳐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도리어 갈수록 불안정해져 가는 한반도의 현실은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 지원해 주신 박선숙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9일

2010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군비축소, 과연 이상에 불과한가?

참여연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 감축이 이상적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현상황에서도 군비축소는 가능하고 또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 첫째,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이미 훨씬 우월하며, 국방비 지출은 남한이 북에 비해 압도적임. 남한의 국방비(250억 달러)는 북한의 GNI(국민총소득) 267억 달러에 육박하며, 남한의 1994-2007년 군사비 총액(1978억 달러)은 북한(215억 달러)의 9배에 달함. 이러한 군사력과 국방비의 불균형은 도리어 북한에게 이른바 적은 군사비로 큰 살상효과를 보도록 하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확보에 치중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

▷ 둘째,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 역으로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할 수 있음. 즉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 수, 과도한 기갑장비와 불요불급한 첨단전력들,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 분야에서 군축이 가능함.

▷ 셋째, 남한은 국방비를 삭감한 사례가 없으나 세계적으로는 군비를 삭감한 사례가 적지 않음. 1980년대 냉전 이후 2000년대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기 전까지 전 세계 국방비는 절반으로 급감했었음. 냉전의 두 축인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최대 68%, 28% 국방비를 삭감했으며 심지어 냉전의 또 다른 최전방 국가인 대만도 최대 20% 국방비를 삭감했음.)

1) SIPRI Database

국방예산 삭감은 점증하는 복지지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임.

2011년도 예산(정부요구안) 309.6조 원 중 국방예산은 31.3조원으로 2010년 대비 5.8% 증가한 것임. 이로서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에 이룸. 국방예산 증가율 5.8%는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성장률 4%대는 물론 정부 예측치 5%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연금과 주택을 제외한 복지예산 증가율이 4%에도 미치지 않는 것²⁾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임.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임. 다시 말해 매일 매일 860억 원씩 엄청난 국민 세금이 국방비로 사용된다는 것임.

한국은 GDP 대비 2.7%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반면 OECD 평균치는 1.7%에 불과함. 반대로 한국은 GDP 대비 2.4%를 사회보장 및 복지비에 사용하는 반면 OECD 평균치는 16.5%임³⁾ 또한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무기수입국 세계 3위임⁴⁾ 국방비가 중요한 측면이 있으나 적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재원이 국방비에 투입됨으로써 다른 복지비, 교육비와 같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약 36조원이면 1,200만 명에게 실업안전망, 생활안전망 제공이 가능함⁵⁾. 국방예산의 10%(약 3조원) 삭감하며 100만 명이 이러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결(1.7조원)만 해도 약 56.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남북한 군사비의 실제와 대북 '급변사태 계획' 의 문제점

남한이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국방비 누계는 남한이 약 2000억달러, 북한이 약 215억 달러로, 남한이 9배 이상 지출하였음. 2009년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DP 278억 달러에 육박함. 2011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GDP규모를 상회하게 될 것임. 2007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GNI)는 북한의 36배 이상임.

또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한 군사전략의 공격성은 크게 강화되었음.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미양국은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개입 계획

2) 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2010)

3)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2008) 국회예산정책처

4) SIPRI Fact Sheet March 2010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09

5)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제안(2009)

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음. 개념계획 5029를 사실상의 작전계획 수준으로 보완한 것임.

양국의 대북 군사계획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하달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의해 새롭게 구체화될 작전계획(이른바 작계 5015)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그간 한미연합사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계획은 기존의 작전계획 5026, 5027을 융합하고 보완한 것으로, 전면전 등의 직접적인 무력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사'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도부를 체포하거나, 북 군사 행정 기구들을 접수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진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이같은 계획들은 '방어'에 목적을 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매우 공격적인 것임.

최근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가 약화된 조건에서 한미가 발전시키는 공격적 계획들의 위협성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함. 특히 NLL은 취약지역임. 남북간 경계가 모호한 서해 NLL 지역에서는 남북간 함정간의 무장갈등이 반복되어 왔음. 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정상회담에서 이 지역을 서해공동어구역 및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권 교체 후 이명박 정부는 기존 남북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음. 그 결과, 서해에서의 충돌을 원천할만한 장치들이 무력화되었고,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2009년 5월 이래 두절되었음.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어 왔음.

NLL지역의 불안정성과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한미간 공격적 군사계획,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공격적 대응전략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무장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의 연평도 사건을 이를 여실히 보여줌.

비대칭 위협을 이유로 한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과 예산삭감의 필요성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사건 이후인 5월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9월 대통령에게 4가지 방향의 개선안을 보고하였음. △한반도 방어 전략을 소극적 방위전략(적의 공격이 있을 뒤 반격)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적의 공격정후 파악, 공격 가시화 전 조치), △군전력 운용을 각군 중심, 현역 중심에서 합동성 강화,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군전력 증강 우선순위를 잠재적 위협 대비 첨단전력증강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현존위협 대비 전력증강과 병행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군병력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22개월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것임. 이 기조는 연평도 사건이후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를 다시 요약하면, 결국 대북억지전략에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점령하거나 선제공격전략을 강화하는 등 공격성을 더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첨단전력 형성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대비할 전략을 대폭 증강하며,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비대칭 대군주의(육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임.

사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음.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군사정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함. 북의 국지도발 위협이나 비대칭 위협을 내세워 군비증강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잃은 것임. 도리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됨. 결국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보다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크게 증액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큼.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우선 '비대칭 위협'을 내세워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공격적 군비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비대칭 위협'이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함. 통상 군사적으로 혹은 군사비에서 열세에 있는 상대가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 분야에서 비대칭적인 수준으로 군사적 타격을 가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비대칭적 위협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군비지출이 북에 비해 상당히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군의 훈련내용이 주로 북한 정권 붕괴 혹은 국지전 이후의 북한 점령을 가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됨.

둘째, 비대칭 위협을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혹은 '능동적 억지전략' 같은 압도적인 군사적 억제력 확보에만 의존할 경우,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의도되는 달리 북의 군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또 다른 비대칭 전력, 즉 보다 비정규적이고 보다 파괴적인 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즉 북한 군부로 하여금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선, 그리고 새로운 게릴라전술의 개발 등에 몰몰하게 할 수 있음.

셋째, 국방부가 북의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 위협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위

협 즉 전면전 위협이나 이를 위한 북의 군사적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예컨대,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 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 분야에서 군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2011년 국방예산 중 삭감 가능한 예산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차기유도무기, F-15K 2차, FA-50, 차세대 전투기사업-보라매 사업, 이지스함 광개토-III,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UAV 등)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였음. 또한 '군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도입 등)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이미 과잉투자된 전면전 대비 전력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 예산의 상당수는 삭감 가능한 것임. 삭감되어야 주요 전력투자비 예산은 다음과 같음

- ▷ 대구경다련장로켓(MLRS), 자항기뢰 등 비인도적 비인도 무기 관련 예산(1626억 원)
- ▷ K21, K1A1, K-2, K-11, K-9(K계열 사업 1조1169억 원), 비호사업(932억 원) 등 기술적 결함이 많고 육군의 과도한 소요제기에 의해 불요불급하게 개발, 양산되는 국산(육군) 무기
- ▷ 한국형 헬기 및 공격형 헬기 사업(1667억 원),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152억 원) 등 경제 타당성과 기술기반 부족한 불요불급 국산무기개발 및 양산 예산
- ▷ 상륙장비 개발 및 구매사업(715억 원), 잠수함 추가도입사업(6986억 원), F-15 추가구매(9143억 원), MD장비(4311억 원), 감시정찰 장비(6153억 원), 제주해군 기지(1493억 원) 등 불요불급하고 공격적인 전력 개발 구매 예산과 기지건설 관련 예산 등
- ▷ 다국적군 파병 656명에 384.2억 원, PKO파병 652명에 252.2억 원의 예산 등

○ 비인도적 무기 개발 및 구매 중단

<대표적 비인도 무기 관련 예산>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대구경다련장(MLRS)	포병전력사업	1,056.75
차기다련장(연구개발)	R&D	474.85
자항기뢰(신규)	R&D	25.60
차기기뢰부설함	상륙/지원함사업	68.36
소계		1,625.56

○ 기술적 결함이 많고 육군의 과도한 소요제기에 의해 불요불급하게 개발 양산되는 국산(육군) 무기 예산 삭감

<주요 국산개발 기갑/기동 전력 관련 예산>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K21 보병전투차량	기갑사업	2,943.53
K1A1 전차	기갑사업	2,420.38
K-2 전차 (흑표)	기갑사업	409.81
K-11 복합형소총	기동사업	545.24
K-9 자주포	포병전력사업	4,850.39
소계		11,169.35

<대표적인 불요불급 장비 : 비호사업>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30mm 자주대공포(비호)	대공포사업	873.34
비호대대 창설	대공포사업	58.99
소계		932.33

○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기반 부족한 불요불급 국산무기개발 및 양산 예산삭감

<한국형 헬기 및 공격형 헬기 사업>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초도양산	지원/특수기사업	997.44
KHP사업(연구개발)	R&D	604.46

한국형공격헬기(신규)	R&D	64.77
소계		1,666.67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보라매사업(KF-X)(신규)	R&D	151.50
소계		151.50

○ 불요불급한 공세전력 개발 구매 사업 및 관련 기지건설 예산삭감

<상륙장비 개발 혹은 구매 사업>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상륙돌격 장갑차 3차	기갑사업	89.74
차기상륙함	상륙/지원함사업	563.79
차기상륙함전투체계(연구개발)	R&D	61.27
소계		714.80

<잠수함 추가 도입>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장보고-II급	잠수함사업	6,314.19
장보고-III급 Batch1	잠수함사업	144.28
장보고-III 전투체계(연구개발)	R&D	251.40
장보고-III 소나체계(연구개발)	R&D	276.50
소계		6,986.37

<F-15 추가 구매>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F-15K 2차	전투기사업	9,143.47
소계		9,143.47

<MD 장비>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광개토-III급(이지스구축함)	전투함사업	1,681.88
차기유도무기(SAM-X)	중·고고도유도무기사업	1,219.94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중·고고도유도무기사업	896.89

철매 II사업(연구개발)(SAM-X)	R&D	512.62
소계		4311.33

<감시정찰 장비>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감시/정찰/정보사업	5700.93
HJAV사업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감시/정찰/정보사업	452.50
소계		6153.43

<제주해군 기지>

사업명	사업분야	예산액(억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부대시설사업	1492.90
소계		1492.90

○ 해외다국적군 파병관련 예산삭감 및 PKO 파병 타당성 재검토 필요

<파병 관련 예산>

예산내용	예산액(억원)	인원수(명)	비고
아프간 오쉬노부대	156.5	321	다국적군 파병
PRT			
소말리아 청해부대	220.0	306	다국적군 파병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예정(국방부 요구안)
대테러 개인파병	7.7	29	증원(24명→29명)
소계	384.2	656	
레바논 동명부대	121.3	359	PKO 파병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예정(국방부 요구안)
아이티 단비부대	121.9	240	PKO 파병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예정(국방부 요구안)
PKO 개인파병	9.0	53	증원(41명→53명)
소계	252.2	652	
UAE	137	150	* 비분쟁지역 최초 파병

군병력 감축해야

○ 군 장성수, 장교수 대폭 감축해야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 장교 7만 명, 부사관 10만 명, 사병 45만 명임. 장교 및 부사관의 인원수는 28%에 불과하지만 인건비는 93%에 달함. 반면 사병은 병력의 3/4을 차지하지만 인건비는 7%에 불과함. 독일의 군장교수는 3만5천명, 프랑스 3만8천명, 영국 32200명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한국 장교 수의 절반 수준임. 국방예산정책처(2009) 자료에 따르면 장교 1인당 인건비 약4,600만원, 부사관 1인당 인건비 약 3,069만원에 달함. 만약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으로 군 간부 매년 10%(장교 7천명, 부사관 1만 명)씩 5년간 감축한다면 9조 3천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주요국가 장교인력>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장교수(연도)	38,000(2002)	35,000(2002)	32,200(1999)	65,000(2005)

<출처> 세계국방인력 편람(2003-2004), 국방부 국회보고자료 참조(2006)

○ 18개월로의 군복무기간 단축 예정대로 이행해야

현재 군복무기간은 22개월임.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21개월로 확정함. 그러나 덴마크의 군복무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며,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6개월, 스웨덴은 최소 260일(8.7개월)임. 폴란드, 독일,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의 군복무기간은 12개월이지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군복무기간도 12개월이며, 중동에서 각국과 긴장상태에 있는 이란의 군복무기간도 18개월에 불과함. 실질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거대병력, 군복무 장기기간은 유지가 어려움. 따라서 군복무기간은 18개월, 더 나아가 12개월 미만 수준으로 단축되어야 함.

○ 군 사병 병력수 감축해야

현재 한국의 총 병력 수는 63만 명으로 적정병력 연구가 제시하는 30만 명 수준에 갑절에 달함. 그리고 한국은 인구 1천 명 당 현역 군인 수가 14.5명으로 5.2명인 미국보다도 약 3배에 달하며, 프랑스 4.2명, 영국 3.7명, 독일 3.5명, 이탈리아 3.3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대군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인건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전력에 적은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 한국은 63만 명의 비대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7.5조원이 인건비

에 투입되며 이는 전체 국방비의 1/4을 차지하는 것임. 1985-2001년 사이 미국은 병력을 35%, 독일 39%, 프랑스 37%, 영국 37%, 이탈리아 32% 등 최소 30% 수준의 병력감축이 단행된 바 있음. 향후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비대칭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국방부의 위협 분석에 따라서라도 과도한 병력 수는 감축되어야 함.

<주요 적정병력 연구>

연구자	통일 전 적정병력 (단위 만명)
박재하	38.3
김충영	26.3~30.7
조동호	29.0
이병근, 유승정	29.9
윤진표	27.4~31.4

<출처> 2008평화백서

※

무책임한 무기거래 뿌리 뽑아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현재 지구상 있는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수는 약 6억 4천 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 매년마다 새롭게 생산되는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수도 800만개에 달함. 국제 무기거래의 규모도 상당해 2007년 한 해 동안 알려진 국제무기거래액은 511억 달러를 넘어섰음. 상당한 양의 무기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국제공통의 기준은 마련된 적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기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집단살해, 초 법적처형, 조직적인 강간 등 인권 유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매년마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25만 명 이상이 평화 시의 무장폭력으로 인해, 30만 명 이상이 재래식 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음. 따라서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이러한 점에서 2009년 12월, 유엔총회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국제 무기거래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준비 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s)를 소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음. 또 동 결의안은 무기거래조약의 최종 교섭을 2012년 4주 동안 개최되는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했음. 이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재래식 무기의 거래에 관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공통기준을 수립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헌을 만들'예정임.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들은 탄약이나 특정 무기 카테고리를 제외함으

로써 조약의 통제범위를 축소하려거나, 무기 이전 승인 기준에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 인도주의법을 제외하려는 등 이 조약의 효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음.

무기거래조약 제정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무기거래조약이 실효성이 있는 조약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은 2011년 무기거래조약 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의 정기 회기와 2012년 무기거래조약 회의에서 조약 문안 교섭 프로세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하여 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이 같은 기준들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교섭 과정에서 표명하여 강력한 조약 제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1)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무기의 거래의 금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 2)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통제목록'을 포괄적으로 작성할 것. 다음의 각호에 명시된 목록이 조약의 통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재래식 무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 탄약, 폭발물, 군사, 치안, 경찰용으로 의도된 이 중용도물품
 - 모든 재래식 무기와 군수품의 수입, 수출, 재수출, 경유, 임시 이전, 환적, 재 이전, 국가 간 이전, 국가사기업이전, 상업적 판매, 임대, 면허생산설비 및 기술의 이전, 차관, 원조 혹은 모든 종류의 현물이나 채권
 - 무기판매상인, 중개인, 또는 다음의 각항을 제공하는 자에 의한 거래: 기술지원, 훈련, 운송, 운임선불, 비축, 재정, 보증, 관리, 치안서비스 등 무기이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타 용역제공
- 3) 무기거래조약은 법적구속력을 갖춘 공식 국제조약으로 제정되어야 함.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교섭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함. ※

21세기 “모순(矛盾)” 전쟁

평화네트워크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MD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한국이 미국의 지역 MD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한국적 미사일방어(KAMD)체계’ 간의 협력은 강화할 방침이지만, 미측의 지역 MD체계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 그러나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 공유, 장비 사용 등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주도의 지역 MD체제로 편입됨을 의미. 즉, 한국형 MD체계를 구축해도 미국의 지역 MD체계에 크게 벗어날 수 없음.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양자 협력을 넘어선 다자간 MD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적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운용상으로는” 데이터와 요격미사일 공유 등의 방식으로 MD 작전 능력을 증진시켜줄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MD 동맹국들 사이의 중복투자를 줄여 비용 절감형 MD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를 실증하듯이 한국은 2010년 7월초 미국과 합동 MD 훈련을 벌인 바 있음.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그 위치 정보를 미국 해군에 제공하자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켰다고 함.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를 통합 운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미사일방어를 혼합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것은 향후 한국의 미국 MD체계 편입에 있어서 필미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또한 한국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인정받기위해 미국의 지역 MD 체계에 참여해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더함.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제한적 실효성 MD 체계 구축 재검토하라

현재 어떤 방식이든 MD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 무엇보다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빌미를 부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음. 또 다른 문제는 MD 구축이 막대한 재정소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임. 한국의 경우 초보적인 MD 인프라 구축만 해도 10조원 이상이 소요되고, 여기에 운영유지비와 추가적인 시스템 구비를 고려하면 수십 조 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이와 같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지만 그 비용 및 실효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MD 자체가 초고속으로 날라 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형과 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MD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회는 올 12월에 열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한미 양국정부의 MD구축 논의 과정을 철저히 감시·검토하여 MD체계 구축이 막대한 정치적, 안보적,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

국민은 파병에 반대한다

나눔문화 / 참여연대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철군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어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오쉬노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었음.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다음과 같은 1) 이미 2007년 다산 동의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점 2) 부대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점 3) 파병 동의안에서 파병 기한을 2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해도 쉽게 철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4)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헌법 5조의 정신을 훼손한 점, 5) 네덜란드가 철군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병국가들이 철군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오쉬노 부대가 파병된 점, 6)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만연하다는 점, 7) 해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가 먼저 철군결의안의 형태로 철군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아랍에미리트(UAE) 특전부대 파병안 부결

정부는 연내에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9일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에 대해 “비분쟁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익 창출을 목적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라며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1) 전투병을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전례가 되어 비분쟁지역에 대한 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2)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군을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국익’을 내세워 해외에 파병함으로써 헌법5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 3)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추진해온 점 4)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중동지역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한 결과 생기게 될 정치, 외교, 군사적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움.

따라서 국회는 아랍에미리트 파병계획을 철회시키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을 비롯해 파병 관련 내용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함. ※

평화의 섬을 평화의 섬답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강정마을은 5개의 보호구역-생물권 보전지역(유네스코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 제442호(문화재청 지정), 생태계 보전 지역(해양수산부 지정), 제주도 해양 도립 공원(제주도 지정), 절대 보전 연안 지역(제주도 고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산호 군락 등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음.

강정마을 주민들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후보지인 강정마을은 2007년 8월 20일 전체 주민투표(오전 6시~오후 8시)를 통해 만 19세 이상 주민 725명이 투표에 참가해 반대 680표, 찬성 36표, 무효 9표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007년 5월 14일 여론조사 방식을 거쳐 제주해군기지 건설동의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은 위법과 부당행정으로 일관되었으며 도의회 행정조사, 도 감사위 감사 등에서 그 위법 사항 등이 밝혀진 바 있어 해군기지 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입지 재선정을 제안했으나, 그 결과 위피마을은 물론 화순리, 사계리 모두 해군기지 유치 거부 의사를 밝혔음.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은 입지 재선정 제안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원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평화를 위한 나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은 북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정책으로 '조건적인 인도지원'을 대북지원의 원칙으로 함. 지난 5.24 대북조치를 통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정치적 상황과 판단에 근거한 '조건적인 인도지원'의 대표적인 조치로 인도주의 정신에 위반되는 처사임. 특히, 민간단체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지원마저 정부의 제한으로 지원되지 못함.

2007년 909억 원에 달하던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액이 2010년 10월 현재 170억 원으로 줄어 2007년 대비 18.7%에 불과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10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 반출신청 보류건수가 3건에 반해 현 정부의 보류건수는 47건임. 보류물자들은 비료, 농약, 의약품, 수술도구 등이 포함됨. (2010년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반도 평화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해야

1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인도적 대북지원은 긴급구호 지원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발지원으로 발전해옴. 특히 정치군사적 위기에 계속된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로켓발사(2009.4.5), 핵실험(2009.5.25), 천안함 사건(2010.3.26)과 함께 병행해 온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규제는 남북관계를 더욱 급속히 냉각시키며 위기의 한반도를 만들어감.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며, 정부의 규제는 중단되어야 함. 이는 곧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인하기 때문임. ※

말 많고 탈 많은 미군기지 이전계획

평택평화센터

평택 미 공군기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왔고 이미 소음도는 85웨클(WECPNL)을 넘고 있음(민간항공기 소음기준인 '항공법'은 75웨클(WECPNL)이상을 소음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활주로나 건설되면 소음도는 증가할 것이며 소음피해 지역 또한 확대될 것임. 또한 활주로 건설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확대로 각종 개발 제한 등이 늘어나 주민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임. 그러나 국방부는 이처럼 평택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활주로 증강사업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았음.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협정(LPP) 위반, 환경영향평가 거치지 않은 활주로 건설 사업 철회해야

이 활주로 건설 사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 토지 관리 계획협정(LPP)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 제2활주로나 들어설 부지는 오래전 주한 미군 측에 공여된 부지이지만, 제2활주로 예정부지에 설치되어있는 패드리어트, 발칸포대 등의 대체부지는 지난 2004년 10월에 체결되고 12월 발표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 토지 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에 의해 안전지역권으로 공여된 부지임. 안전지역권은 각종 폭발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안전지역권에 또 다른 위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정위반행위임. 절차상으로도 '개정협정 →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확정 → 예산지출'이 되어야하지만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확정 → 예산지출 → 개정협정'으로 추진되었음.

또한 대한민국 법률 제9037호인 '환경영향평가법률'에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976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며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미군이라도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은 국내법은 존중만 할뿐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지난 제6대 평택시의회는 제1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 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평택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평택시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음. 그리고 지난 4월 29일 평택 미 공군기지 인근 지역주민 20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평택 미 공군기지 활주로 건설 사업무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최소한 민간소음규제법과 동일한 기준과 내용의 군 기지 소음규제법 제정해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 기지인근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항공기, 사격장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재산피해를 감수 당해왔음. 최근 군 기지인근의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민간소음규제법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법안 마련이 절박해진 정부는 2009년 12월 7일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 1806863)'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 법률안은 2008년 12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고 2010년 4월 19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6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제출한 유사한 법률안과 공동으로 심의될 예정으로 있음.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85웨클(WECPNL)이상(공공시설의 경우 75웨클)의 지역만을 소음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각종 소음대책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75-80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가치 하락 등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85웨클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소음대책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의 효율적 예산운용이라는 정책의 공급자 입장을 중심에 놓은 것으로 보이며 민간항공기기준인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기준인 75웨클과의 형평성에 맞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함.

정부가 제출한 법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평택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지역은 총 26,413세대

의 약2%에 해당되는 568세대만이 해당될 수밖에 없음. 이에 지난 60년간 방치되어있는 군
기지 인근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간소음규제법안과 동일한 기준과 내
용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

천안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참여연대

민군합동조사단의 5월 20일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남북한은 ‘전면 전쟁’
을 운운할 정도로 대립했고, 한반도에는 전쟁이 곧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었
음. 이렇게 천안함 조사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조사결과는 매우 객관
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조사결과에는
많은 의문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
회를 만들어 활동했으나 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바 있음.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라 제기된 문제들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상
황임. 따라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철저한 검증작업
외에,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점, 국민과 국회의 합의도 없이 무
리하게 국제무대로 가져가 소모적인 냉전적 대결외교의 대상으로 삼은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회적 비용과 외교적 대가를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북한, 러시아, 중국을 포함하는 다국적 조사단을 꾸려 보다 객관
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천안함 관련 기초 자료 공개해야

천안함 침몰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
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조차 공개 안함. 게다가 250여 쪽에 달하는 상세보고서를 유엔과 미국
에는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3일이
되어서야 280여 쪽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함.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끊임없
이 지속되는 것은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가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1) 천안함의

항적과 항적 간 수심층, 2) 교신기록, 3) 해외 전문가들의 분과별 역할과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결정적 증거의 발견이나 그 과학적 입증작업에 참여했는지의 여부, 4) 북한산 어뢰 설계도의 출처와 카탈로그, 5) '연어급 북한 잠수정'의 성능, 제원, 항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함.

천안함 조사결과를 둘러싼 의문을 과학적으로 해소해야

5월 20일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하기는커녕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음.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들은 해소되지 못했음. 실제로 KBS 추적 60분등의 검증결과,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국방부가 이를 알면서도 국방부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음이 밝혀짐. 따라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둘러싼 의문들 1) 천안함 선체와 어뢰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흡착물 성분 관련, 2) 우현 스크루의 휨 방향 관련, 3) 북한 어뢰 설계도 관련, 4) 연어급 잠수정 관련, 5) '1번'글씨 관련 등의 의문들 명확하게 해소되어야 함.

국방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책임 규명해야

천안함 침몰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방부는 1) 사건 발생 시각, 2) 69시간의 생존 가능성, 3) 북한 어뢰 설계도 관련, 4) 물기둥 관련, 5) 북한 어뢰 관련, 6) 연어급 잠수정 관련 등 천안함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입장을 번복하거나 말을 바꾸어 왔음.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말이 번복된 점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심지어 천안함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 사건 발생 시각 조작, TOD 동영상 편집 등에 대해서도 사죄는커녕, 그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음. 국민들이 국방부의 말 바꾸기로 큰 혼란에 빠졌던 점에 대해 국방부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이후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함. ※

No 핵무기 Yes 비핵시대

평화네트워크

한국은 2012년 제 2회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음.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비확산 체제에 기여할 것이 요구됨. 현 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 법안 통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북아 비핵시대 창설 논의 주도, 핵문제 관련 UN 결의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과 태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ITBT)의 조기발효를 위한 협조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해야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도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게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2년은 한국의 핵 안보 정상회의와 북한의 강성대국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론의 핵심 목표는 김일성 주석의 유혼을 관철하는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역시 김일성의 유혼 가운데 하나임.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구축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

18대 국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 법안 통과시켜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9년 7월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서를 냈고, 그해 11월 25일 18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원폭피해자 특별 법안이 제출되었음. 그러나 2010년 11월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임. 재심의 때 예산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18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 논의 주도해야

북핵문제가 장기간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곧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책임감과 주도권을 갖고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초기 논의를 제안할 것을 요청함. 이미 일본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내 핵군축 촉진 의원연맹에 의해 ‘동북아시아 비핵무기금지 조약안’을 발표했다. 또한 동북아 비핵지대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다수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명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국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와 일본위원회 간에 2009년부터 국제회의와 심포지엄 등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있어 왔음.

핵문제 관련 UN 결의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과 태도 견지해야

200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핵문제 관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보면,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국제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과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핵군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음. 당시 표결에 참석한 국가들의 찬성률이 80%를 상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열망과는 배치되는 선택이 아닐 수 없음.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핵문제 관련 UN 결의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해야 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발효를 위해 협조해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이란 1996년 9월 10일에 뉴욕에서 세계 138 개국 대표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핵실험

을 완전 봉쇄하기 위한 안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국제조약임. 그러나 아직까지 발효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처럼, 한국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2012년에 CTBT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가 요청됨. 특히 대미 외교를 강화해 미국이 조속히 이 조약에 비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필요. ※

죽음의 비, 집속탄

무기제로팀

한국은 대표적인 집속탄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동시에 비축국임. 집속탄은 그동안 커다란 인도주의적 문제점들을 발생시켜왔으며, 현재 집속탄금지협약을 통해 전세계적인 금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한국은 남북관계를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의 참여를 거절하고 있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분쟁지역에 집속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인도무기의 생산과 수출로 인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속히 집속탄금지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

집속탄은 확산탄, 또는 모자탄 등으로도 불리며 '가장 잔인한 폭탄' 네이팜탄, '침묵의 살인자' 지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인도무기로 집속탄은 '죽음의 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음. 집속탄은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식이어서 이 무기를 주거지역 인근에 사용할 경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 시설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분쟁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들을 남겨 마치 대인지뢰처럼 지속적으로 민간인들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중 1/3은 어린이들이라고 함.

1960년대 이래로 크게 증가해온 집속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코소보 전쟁 중 나토의 집속탄 사용,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엄청난 집속탄 사용을 계기로 2003년 범세계적인 집속탄 금지 운동인 집속탄금지연합(CMC: Cluster Munition Coalition)이 시작되었음. 이는 곧바로 2006년 2월 벨기에의 집속탄 금지 법안 통과와 6월 노르웨이의 (집속탄)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이끌어내었고 2006년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으로 집속탄 폭격이 촉매가 되어, 2006년 11월에 노르웨이 정부는 오슬로프로세스(Oslo Process)를 발의했으며 이는 2008년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으로 이어졌음.

비록 이 협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는 등 한계도 존재하지만,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송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뿐만 아니라 집속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위험방지를 교육하며, 오염된 땅을 정화하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목표들에 대한 국제 원조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었음. 집속탄금지협약은 2010년 8월 정식 발효되었으며, 2010년 11월 현재 108개 정부가 서명했고 46개 국가가 비준했음.

비인도적 무기인 집속탄 생산, 수출, 비축 중단하고 집속탄금지협약 참여해야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적대관계를 이유로 국제적인 집속탄 금지 운동의 흐름을 거절해오고 있음. 한국은 2008년 12월 오슬로에서 있었던 조인식에는 옵서버로 참석한 바 있지만 집속탄금지협약의 진전과 교섭, 채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 오히려 한국은 집속탄금지협약이 제안되자 전쟁잔존폭발물(ERW)을 다루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5의정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집속탄금지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음.

이 같은 이유에는 한국이 집속탄의 주요한 생산국이자 수출국, 비축국이기 때문임. 현재 한국에서는 한화화 풍산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집속탄 종류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 정부가 비인도무기인 집속탄을 생산, 수출, 비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속히 집속탄금지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 ※

불필요한 국산개발 고성능 전차

무기제로팀

차기 전차 K2(일명 흑표)가 2000억 원을 들여 국산 개발을 마치고 2011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자평하며 홍보하며 모든 장비가 최첨단이며 탑재추적 기능, 능동방호체계 등 일부 장비는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음. 개발 단계에서 터키와 수출 계약을 맺었음.

결함 많고, 불필요한 고성능 전차 개발 사업 중단해야

그러나 2010년 국정감사를 통해 K2를 비롯한 K계열 육군 무기들에 부품 및 설계 결함이 제기되었음. K2 전차는 엔진의 변속기 결함이 발견되어 원인 규명과 보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양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 고성능 전차를 국산 개발했다고 홍보와는 달리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는 무기 국산화와 방위산업 사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은 노후한 전차를 보유한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전차 이외에도 한국은 수많은 대전차용 무기를 가지고 있음. 게다가 한반도와 같은 산악 지형에 전차가 유용한 전력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전력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K2 전차처럼 고성능 전차까지 개발해야 할 만큼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총예산 6조원을 예정하고 있는 차기 전차 개발 사업에 2011년 예산으로 410억 원이 책정되었음. 이와 별도로 K1A1 전차에 2450억 원이 책정되었음. 이러한 불필요한 고성능 전차 개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 ※

타당성 없는 최대규모 예산지출,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전쟁없는세상

국방부는 노후 헬기 대체 및 헬기 제작 기술 국산화를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에 총사업비 9조 1천억을 투자 중. 개발에 이미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240대 양산을 위해 4조 2천원을 더 투입 예정임. 또한 공격형 헬기 개발을 위해 2011년 예산으로 1000억 원이 책정되었음.

예산 투자에 비해 경제적, 군사적 타당성 낮은 한국형 헬기 사업 재검토해야

그러나 교체 대상 기종의 헬기는 평균 10억 원이지만 개발 중인 한국형 헬기는 대당 200억 원임. 국산 헬기 수출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홍보하지만 이 기종의 헬기 시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또한 세계적으로 헬기 시장은 축소되고 있으며 헬기는 전력으로 삼기에 문제가 많아 대표적 감축 대상 무기임. 게다가 이미 한국은 헬기가 너무 많음. 북한보다도 2배 이상 많으며 중국·일본과 비교해도 많음.

현재 50~60%의 국산 기술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핵심부품 174개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임. 또한 국방부는 공격헬기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격헬기까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20조 원 가량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고 알려져 있음.

특히 공격헬기 개발은 임무 면에서 볼 때 한반도 신뢰 구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생존율이 떨어져 비용 대비 전력 효과도 의문시됨. 최대 규모의 예산 투자에 비해 경제적·군사적 타당성이 낮은 헬기 개발 사업은 재검토, 수정되어야함. ※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 추구, 이지스함

평화바다

현대 무기의 총이라 불리며 현존하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전투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을 한국은 현재 2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3번함을 건조 중임. 1척당 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운용 유지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의 장비임. 이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떠맡쳐야 함.

이지스함을 비롯한 대양해군 전략 전면 재검토 및 수정해야

또한 이지스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국방부는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 MD로의 참여가 아니라 한국형 MD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연합 방위체제를 이루고 있어 미사일 방어만 예외로 둘 수는 없음. 실제로 해군은 미국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미국 MD로의 편입 및 종속을 의미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한국이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한 이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임. MD는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니며 봉쇄 전략이며 해상 봉쇄의 현 실태가 이지스함임. 이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도 직결될 것임.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20여척 규모의 기동전단의 모항이 될 것이며 또한 미 함대의 기항 구실도 할 것이기에 제주는 MD 체제의 기지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와 마찰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현재 해군은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대형 상륙함, 차기 구축함, 차기 잠수함 등을 개발하며 대

양해군의 꿈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북한을 상대하는 수준을 넘어 원해 작전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임. 그러나 원해 작전 능력은 한국 해군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미국과의 공동협력이 있어야 함. 따라서 미국의 제해권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양패권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이는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가는 결과로 귀결되며 돌아올 책임이 클 것이기에 이지스함을 비롯한 대양해군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함.
※

정책제안 14 차기 전투기사업 반대

항공산업 발전 앞세운 타당성 없는 공격적 전력 투자

전쟁없는세상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이 2차까지 마무리되고 2조 3천억 원을 들여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도입 중. 3차 사업은 10조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임. 한편 이와 별도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보라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2010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탐색개발조차 추진되지 못했지만 2011년 국방 예산안에 또다시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되었음. 2011년 예산으로 FX 사업은 9143 억 원, KFX 사업은 151억 원이 책정되었음. 이 사업들은 전투기 증강 외에도 항공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어져 왔음.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중단해야

그러나 FX 사업은 그동안 미 공군이 비행도 금지하고 더 이상 구매도 하지 않는 F-15 전투기를 대당 1300억 원을 들여 직구매하고 있는 사업임. 1~2차 사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음. 향후 3차 사업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종들의 경우에도 업체와 미국 정부가 기술 보안의 이유로 무조건 직구매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3차까지 오는 동안 고가의 전투기만 살 뿐 기술 획득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FX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예정인 KFX 사업은 이미 2007년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무산되었던 사업이지만 또다시 부활시킨 것임. 국제공동개발로 예산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전투기 생산에 확실한 기술 기반 없이 추진하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향후 기술적 문제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설령 기술적으로 도달한다 해도 5조원으로 예상한 개발비로는 개발 자체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음. 향후 양산 물량에 따라 엄청난 재정 부담이 함께 올 것이 명백함.

항공 전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데도 조 단위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전투기 사업이 현재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전투기 사업들은 동북아에서 불붙은 군비경쟁을 더욱 부채질하는 사업임. 이를 따라 가면 막대한 예산 부담만 가져올 뿐 평화공존의 길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게다가 전투기 완제품 도입·개발의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항공 산업의 발전에도 전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전투기 도입·개발에 앞서 항공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이 계획 중인 FX 3차 사업과 KFX 사업은 중단해야 할 것임. ※

